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 이행점검을 위한 2019 전라북도 도민평가단 출범식을 갖고 송하진도지사를 비롯한 도민평가단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민평가단 본격 가동

ARS·전화면접 통해 선발된 도민 50명 참여
대규모 사업 이행상황 점검·개선 의견 제시 등

전북도가 민선7기 송하진 도정의 공약사업 및 5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이행상황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와 함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라북도 도민평가단(이하 도민평가단)'을 꾸리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송하진 도지사는 29일 오후 2시에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민평가단 출범식을 갖고 각계각층에서 참여한 도민대표 5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출범한 도민평가단은 '전라북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북도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평등한 참여기회 제공,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 등을 위해 전북도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사무총장 이광재)에 위탁해 만 19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시군, 연령, 성별을 고려하여

ARS 무작위 추첨과 심층 전화면접을 통해 선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민평가단에 대한 위촉장 수여에 이어,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니페스토 운동과 도민평가단의 운영'이란 주제로 류일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책자문위원의 특강과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5개 분야로 나뉜 각각 10명씩 분임을 구성하고 20건의 토의안건도 선정했다.

안건은 지난해 7월 민선7기 출범 이후 1년 동안 101개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실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12개 사업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 중에서 도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도민평가단은 앞으로 2021년 8월까지

2년 동안 송하진 지사의 민선7기 공약사업 및 전라북도 주요사업의 전반적인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와 함께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북도는 도민평가단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천계획을 다시 한 번 다듬고 공약 관련 실·국장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약사업 자문평가단' 심의를 거쳐 10월까지 공약 실천계획 변경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도청 누리집(www.jnbnbuk.go.kr)에 게시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도민평가단 출범을 계기로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점검과 평가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책수립과 집행, 사후관리 등 도정 전반에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 많이 담아낼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치매노인 실종 예방 안전망 구축

인구의 고령화로 치매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치매환자는 전국적으로 약 75만명이며, 전북도는 3만 9000명으로 전체 노인의 11.33%가 치매환자로 추정되고 있다.

도내 치매노인실종 신고 또한 최근 3년 간 한 해 평균 370건 이상 발생하였으며,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노인 실종예방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도는 광역치매센터, 시군 치매안심센터, 전북지방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치매노인 실종 예방 안전망' 구축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14개 시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대상 의류부착 인식표,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를 4718명(2019년 8월말 기준)에게 무료로 보급했으며, 지문 등 사전등록을 위해서 도내 모든 치매안심센터에 지문등록스캐너를 구비하여 기존에 환자 및 보호자가 경찰서로 직접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치매안심센터 내에서도 사전등록을 가능하게 하여, 실종노인 발생 시 전산망 조회로 보다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

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북지방경찰청에서는 치매노인 실종 사고 발생 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해 가정의 빠른 복귀를 돕는 배회감지기 980여대를 무상 보급(대여)해 보호자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있으며, 전북도에서는 2020년부터는 경찰에서 무료 보급중인 배회감지기 사용료 개인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실종치매노인을 찾기 위해 중앙 및 광역치매센터에서 TV, 인터넷 등 홍보, 전단지 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보호 중인 무연고 노인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실종노인 발생 시 찾아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올 가을엔 전북순환관광버스 타고 여행가요”

전북 14개 시·군 주요 관광지 55개 코스... 전담해설사 동승

전북도는 올 하반기 관광객 유치에 힘쓰기 위해 전북 순환관광버스를 도내 순환형, 광역형(수도권·경상권) 및 KTIX 등 기차 연계형 등 3개 유형으로 총 55개 코스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내 14개 시군 주요 관광지를 전담해설사가 동승해 생태관광, 지역축제, 체험관광을 포함하여 보다 쉽고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전북 순환관광버스는 매주 토, 일요일에 운영된다.

올해 상반기 전북 순환관광버스 탑승객은 전년도 동기 대비 10% 증가한 5689명이 이용하는 성과를 보였다.

하반기 가을을 맞아 전북도 순환관광버스는 문화관광객제로 선정된 김제지평선축제, 무주반딧불축제, 임실 N치즈축제, 고창모양성제, 순창장류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 및 정읍 구절초꽃축제 등과 연계하는 코스 운영으로 지역축제와 주요관광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특히, 가을을 알리는 붉은 꽃무릇이 만개하는 고창 선운사와 부안 채석강·곰소를 연결하는 순환관광버스를 운행하여 고창과 부안의 천혜의 자연경관을 둘러볼 수 있다.

또한, 11월에는 한국대표 관광지 100선에 선정된 정읍 내장산 및 남

원 지리산노고단, 순창 강천산, 고창 선운산이 포함된 코스를 이용하면 울긋불긋 환상적인 오색단풍에 흠뻑 취할 수 있다.

전북순환관광버스 도내순환형은 1만인, 광역형은 당일코스 3만인, 1박 2일 코스는 9만7000원~10만7000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btour.co.kr/>) 또는 전화예약(☎ 1588-1466)으로 가능하다.

도 김희옥 관광총괄과장은 “순환관광버스는 관광객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테마형 등 다양한 코스를 운영하여, 관광객들이 ‘대한민국 여행체험 1번지’ 전북의 맛과 멋, 흥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정부, 내년 513.5조 ‘슈퍼예산’ 편성

보건·복지·노동 예산 181조6000억원... 역대 최대 증가
R&D 예산 17.3% 늘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도 대폭 증가
국방 예산 최초 50조원 돌파... 장병 복급 ↑·첨단 무기 확충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2년 연속 총지출 증가율 9%대를 유지하며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글로벌 경기 부진,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대외 여건 악화로 둔화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본의 수출규제를 '전화위벽'의 기회로 삼아 R&D(연구개발) 및 산업 분야 투자를 통한 신(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이를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심의·의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내년에는 세수 호황까지 막을 내리면서 국제 수입까지 쪼그라들지만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재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와 내년도 경제가 어려운데 이를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다시 성장 경로로 복귀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2년 연속 9%대 지출증가

율을 설정했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보건·복지·노동의 예산안을 올해(161조원)보다 20조6000억원 많은 181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최대 증가율인 12.8% 증액된 셈이다. 국민연금급여(3조9841원), 주택구입·전세자금(1조8000억원), 기초연금(1조6813억원), 구직급여(2조3330억원) 등이 증액됐다.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가 차지하는 예산은 25조8000억원으로 올해(21조2000억원)보다 21.3% 늘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지원하고 노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13개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중소기업 출산 육아 대체인력 지원금을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총원한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및 인공지능(AI) 인재 육성 등을 위해 R&D 예산은 올해 20조5000억원보다 17.3%(3조6000억원) 늘어난 24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전략 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에 1581억원, 소재부품 지원센터 15개의 기반구축을 위해 990억원을 투자한다. 인공지능융합 선도 프로젝트에도 신규 139억원을 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23조9000억원으로 올해 18조8000억원보다 27.5% 증가했다. 이번 12개 분야 중 예산 증가 폭이 가장 크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받고 통상정보센터를 설치한다. 창업·벤처에 역대 최대규모인 5조 50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한다.

환경 분야는 올해(7조4000억원)보다 19.3% 늘어난 8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미세먼지 저감 투자를 확충하고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 투자 수요 중심으로 증액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2조 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9% 늘렸다. 노후 SOC 개량,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추진,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확대했다.

농어업 스마트화 지원,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올해보다 4.7% 증가한 21조원으로 편성됐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8조원으로 올해(7조2000억원)보다 9.9% 늘었다. 5G, 한류 기반 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은 고교무상교육, 대학혁신 등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예산도 올해보다 2.6% 늘어난 72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외교·통일 분야의 내년 예산은 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0% 늘려 편성했다. 국방 분야는 장병 복급 인상, 첨단 무기체계 확충 수요 등으로 최초 50조원을 돌파한 50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76조 6000억원에서 80조5000억원으로 3조 9000억원(5.1%) 늘어난다.

내년 총수입은 482조원으로 올해 476조1000억원보다 1.2%(5조9000억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업황 부진, 재정 분권 등에 따른 세수 둔화 탓이다. 이에 따라 국제수입도 올해 294조8000억원에서 내년 292조원으로 0.9%(2조8000억원)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